

## 일반 논평

# 한국 정치생태학 연구의 현 단계에 대한 짧은 대화\*

황진태\* · 박양범\*\*\*

## 다섯 가지 메모: 황진태

한국 정치생태학 연구의 현 단계에 대한 발표 제안을 받았던 당시에는 이왕이면 그간 축적된 국내 정치생태학 연구를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의의와 한계를 짚고 전망까지 수록한 두툼한 리뷰논문을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임용된 학과는 공간 연구가 주가 아니고 사실상 새로운 학문 세계에 진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서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리뷰논문 작성은 마음을 접어야 했다. 이 논평은 정치생태학 분야의 신진학자가 리뷰논문을 쓸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그 논문을 집필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메모 정도로 남겼다.

\* 본 논평은 한국공간환경학회 2023 추계학술대회에서 기획한 특집세션 <비판적 공간환경연구의 현 단계>에서 정치생태학 분야에 대한 황진태의 발표와 박양범의 토론을 정리하여 신는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dchjt@dongguk.edu)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 연구보조원(pyb2221@snu.ac.kr)



첫 번째 메모는 여전히 어려운 후학 양성의 어려움에 대해서이다. 대학원 진학을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은 비판적 공간학문 후속세대 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정치생태학은 비판적 공간학문 분야에서도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점과 정치생태학을 전공한 교원 임용이 미미하다는 점은 가뭄과 같은 인재난을 발생시켰다. 물론 환경 탓만 할 수는 없다. 인류세, 기후변화, 자연재난, 팬데믹 등의 정치생태학 주제들은 사회적 차원의 화두가 되었다. 새로운 화두들에 조용하여 변화하는 세계에서 정치생태학을 지도할 교원이 없더라도 신진학자들은 나름의 시대적 문제가 되어버린 주제들을 자신의 연구로 삼켜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리 만치 정치생태학의 모(母)학문인 지리학계에서 정치생태학 전공 후속세대는 드물다. 정치생태학의 특성상 환경, 자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사회과학 이론에 대한 방대한 학습량이 후속세대에게 문턱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본다.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지 《공간과 사회》에 최근 게재된 정치생태학 논문들을 보면 이 분야의 1세대 학자로 분류되는 최병두 대구대 명예교수가 여전히 '현역'이라는 사실(최병두, 2020a; 2020b; 2022)에서 그의 학문적 탁월함을 재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주목한 인류세, 팬데믹, 녹색전환과 같은 뜨거운 화두들은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의 무력무력 성장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현재,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대론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이론적 혁신을 가미한 분석을 못 하라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의식적으로 지리학과는 정치생태학 분야의 후속세대 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비록 교수 본인의 전공 분야나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정치생태학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 있다면 연구를 격려해야 한다. 한국공간환경학회는 정치생태학 관련 학술세미나를 주최하고, 《공간과 사회》 편집위원회는 특집호 주제에 자연, 환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안배를 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 주제를 다루는 학회인 환경사회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눈에 띄는 신진학자들을 학술대회나 학술지 특집호에 초대하는 등의 외부 수

혈을 통해 정치생태학에 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메모는 이론적 혁신에 관해서다. 15년 전 석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여러 논문들을 읽으면서 나의 이론적 고민은 앞서 누군가가 이미 했고 이 지구상에 새로운 이론은 없다는 결론을 대학원생 동료들끼리 씩씩하게 공유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정치생태학 연구의 주변부, 비서구, 비영어권에 속하는 한국에서 집필할 정치생태학 논문도 해외 이론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사례연구로 머물러야 할까? 필자가 가리키는 이론적 혁신은 대학원생 시절에 동료들과 반농담으로 했던 ‘지구상에 새로운 이론은 없다’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들이 내밀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환경정치(Environmental Politics)》, 《환경과 계획 E(Environment and Planning E)》와 같은 정치생태학 관련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에서 언급된 ‘세련된’ 이론을 가져와 국내 사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이론적 혁신이란 추상적 차원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을 만한 개념이나 이론의 제시에 방점을 두지 않고, 제1세계에서 제조된 이론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대한 중범위(meso-level)적 사유를 얼마나 두텁게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여기서 중범위는 지리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적 측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아시아, 한반도, 한국, 서울-지방과 같은 공간들을 가리키고, 개념적 측면은 이곳의 공간적 맥락이 반영되어 발효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 동아시아 (신)냉전, 유교 가부장제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필자가 국내 정치생태학 연구에 미약하게 기여한 한 가지는 한국의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자연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밝히고자 서구 학자들이 제시한 ‘국가-자연(state-nature)’ 개념(Whitehead et al., 2007)을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의 맥락에서 재개념화한 것을 들 수 있다(Hwang, 2015; 황진태·박배균 2013; 황진태, 2019). 이후 한 사회학자(김준수, 2018)는 필자의 국가-자연 연구가 인간중심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하면서 인간 너머의 관점을 강조하였고,

또 다른 지리학자(김지영, 2021)는 필자가 해방 이후에 국가-자연이 출현한 것으로 가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일제강점기에 '국가풍경'의 출현을 주목한 연구를 시도했었다.

이처럼 필자가 동아시아 맥락에서 재개념화한 국가-자연에 대한 연구자들의 수용과 비판이 오고 가는 논쟁의 촉발을 통해 중범위적 사유는 한층 두터워졌다. 이러한 중범위적 사유의 활성화가 이론적 혁신의 예로 볼 수 있지만, 나아가 국가-자연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던 서구 학계를 향한 비판과 대안적 이론화를 모색할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예컨대, 국가-자연 개념에 내재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받고나서 필자는 국가-자연 개념을 구성하는 뿌리인 밥 제슉(Bob Jessop)의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인간 너머의 시각에서 비판하고 이론화한 '인간 너머의 국가론'을 제안한 바 있다(Hwang, 2021; 김준수 외, 2022). 지금 필자의 정치생태학적 시각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으로 향해 있다. 도착지 없는 유영(遊泳) 중이다.

끝으로 강조할 부분은 이론적 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논문의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의(justice)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치생태학의 학문적 특성상 실천적·정치적·정책적 의의와 관련해서도 이론적 혁신은 중요하다. 제1세계나 제3세계에서 사용된 개념을 탈맥락적으로 한국에 이식하는 것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경험했던 정치적 효과가 이곳에서도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진보적 개념이고 해외에서 각광 받았더라도 자신들이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서의 중범위적 사유가 숙성되지 못한다면 그 개념이 투영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 개념에 동조하는 사회세력을 결집하는 데 실패하기 쉽다.

세 번째 메모는 현장연구의 성실함에 대해서다. 지리학자들은 공간을 연구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현장연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양적 방법론 기반 지리학자라도 현장연구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메모에서 다룬 이론적 혁신을 보여줄 영감을 현장에서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정치생태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에 대

한 연구라면, 중앙 언론의 외면을 받은 지역, 당사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실천의 의의도 있을 것이다. 현장연구의 성실함이 잘 구현된 국내 정치생태학 연구성과로는 단연 학위논문으로는 처음으로 정치생태학을 앞세운 엄은희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환경의 신자유주의화와 제3세계 환경의 변화: 필리핀 라푸라푸 광산 프로젝트의 정치생태학」, 2008년 8월 출간)을 손꼽을 수 있다. 당시로서는 낯선 개념인 정치생태학을 논문 제목에 넣었다는 사실에서 의의가 있다기보다는 수년에 걸친 현장연구로 제3세계 정치생태학 연구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점이 지금 읽어도 강렬한 울림이 배어난다.

필자가 현장연구의 성실성을 세 번째 메모로 남긴 의도는 엄은희 박사의 논문에서 보여준 장기적인 현장연구를 모든 연구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단순하게 각자가 작성할 논문의 완결성과 관련된다. 즉,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한 현장연구가 성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분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세계 표현하면, 인터넷 신문 기사를 긁고, 현장연구를 했다는 알리바이로 알팍한 인터뷰와 '인증 사진'을 혼합한 어떤 뒤죽박죽된 덩어리를 논문으로 칭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태함과 둔감함에 대하여 묻는 것이다. 정치생태학과 인접한 환경사회학 전공 신진 연구자들의 최근 성과들(김지혜·김우창, 2022; 박진영, 2023)에 비옥한 거름처럼 깔려 있는 현장연구의 성실성은 정치생태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전반을 향해 자성과 각성을 촉발시킨다.

네 번째 메모는 융복합 연구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에 관해서다. 그간 정치생태학 연구는 이론적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담론 분석과 현장연구에 머물면서 방법론적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다고 평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현장연구는 사건(오염, 재해 등)이 발생한 현장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관찰에 집중됐었다. 오늘날 매우 국지적인 사건부터 전 지구적인 사건들까지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이 교차하고 있으며, 온전히 정치를 배제한 생태적 사건도, 온전히 생태를 배제한 정치적 사건들로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치생태학적 사건들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정

치생태학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융복합 연구의 주제들인 인류세, 기후변화, 자연재해는 이미 여러 학문에서 최전선의 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리학은 태생적으로 융복합 학문이라지만, 현실은 각자 전공의 연구실에 갇혀 지내다 간혹 술자리 테이블에서나 함께 만난다. 지금까지 융복합은 주로 메타포로서 전유되었고, 실질적인 연구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고 이제 “융복합 연구를 시작하자!”고 선언하면 자연히 연구가 나올 리 만무하다. 필자가 지리학계에 6년 전 선언 비슷한 것을 했었지만 의미 있는 공명(共鳴)은 없었다(황진태, 2018). 이번 메모의 방점은 융복합 연구의 시작이 아니라 융복합 연구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있다. 술자리 테이블이더라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만난 자리이니 공통의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론과 방법론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학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의 재미, 희열을 확인했다면, 술이 깨고서 학교 강의실, 연구실에서 상호 관심이 확인된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해 보자. 그런 작은 사슬들이 연쇄적으로 얽히면서 언젠가 대형 프로젝트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설령 더 큰 진전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 융복합 연구를 다시 하게 될 때를 위한 ‘라포(rapport)’ 형성만으로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필자가 재미와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는 것은 융복합 연구가 실제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본연의 핵심 연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융복합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학계뿐만 해외 학계에서도 융복합 연구는 정치생태학과 같은 특정 분야의 학술지를 넘어서 미디어의 관심이 높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영향력 있는 국제 저명 학술지에서 관심을 갖는다. 당연히 대형 프로젝트 유치 가능성, 연구자의 인지도 등의 이해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부가적 보상을 기대한다면 연구는 삐걱대기 쉽다. 융복합 연구를 본인 연구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물론 잊지 않는 것)이 역설적으로 융복합 연구의 질을 보장하고, 연구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이다. 이 메모는 필자에게도 적용된다. 몇 년 전, 융복합 연구를 하자고 선언은 했지만 정작 지리

학에선 반응이 없다가 새로운 영역인 북한학으로 진입하면서 자연과학자들과 자연스럽게 재미로 만나면서 융복합 연구주제들을 도출하기 시작했다. 정치생태학 후속세대는 자연지리 연구실, 지리정보체계(GIS) 연구실의 문부터 두들겨 보자.

다섯 번째 메모는 정치생태학에서 근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 관해서이다. 앞선 메모들에 비해 마지막 메모는 특정 분야를 미시적으로 논하려 한다. 그만큼 지난 몇 년간 정치생태학에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부상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공간과 사회》에서는 국내에 인간 너머의 지리학, 신유물론 연구를 활성화한 특집호[“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2018년), “동아시아 수직 공간의 정치”(2021년),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III)”(2020년)]를 다수 기획하고, 관련 일반논문들도 꾸준히 게재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게재된 논문들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 신유물론의 최전선 논의를 수용하면서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의 ‘중범위적 사유’를 끌어내는 등의 통찰 있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신진학자들이 주요 필자로 참여하면서 자발적 동력이 상당하다는 점은 첫 번째 메모에서 언급한 후학 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성과들이 축적되는 것은 반갑지만, 앞으로 정치생태학 연구가 더욱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을 짚고 가려 한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그동안 공간의 생산이 인간이 중심이 되고 환경, 비인간은 배경으로 국한하려는 인간 예외주의(human exceptionalism)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간 예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들(비인간 카리스마, 비인간 행위성, 정치적 동물, 감응역량, 다종적 접근, 사물의 의회, 비인간 노동력 등이 발명되었다. 어느 분야가 되었든지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가 모든 연구의 질적 담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서 제시된 개념어들이 연구자의 충분한 이해, 성찰을 거치지 못하면서 분석에서 미숙함이 드러나고 심하면 오독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일종의 최신 유행 상품(hipness)처럼 인간 너머의 지리학 개

념들이 내뿜는 낯섦, 새로움이 해당 개념을 차용한 연구자의 미숙한 분석을 가리는 위장효과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인간 중심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인문’ 지리학자들의 시선에는 그러한 위장막이 더욱 투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처럼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 대한 충분히 깊은 성찰 없이 비인간 관련 개념들의 사용자체가 정당화되는 상황을 가리켜 ‘비인간 예외주의’로 지칭할 수 있다. 비인간 예외주의를 슬슬 경계할 분위기가 조성될 시점이다.

### 다섯 가지 메모에 대한 몇 가지 주석: 박양범

황진태 발표자의 메모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서게 된 필자는 해당 취지에 응답하는 의미로, 메모에 주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필자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정치생태학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이나 학문적 배경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다만, 일부 메모에 대해서는 ‘신진’ 연구자로 분류되곤 하는 필자의 처지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발표자의 몇 가지 논평에 대해서는 비판적 독해를 시도한다.

먼저, 네 번째 메모에서 융복합 연구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황진태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지리학은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만 보아도 알 수 있듯, 그 자체로 문과와 이과를 넘나들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필자가 몇몇 학술행사에 참여했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자연지리나 공간통계 전공자들의 연구 내용과 의의를 이해하는 데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을 썼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 보니 손쉽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어째서 이 연구가 지리학인가?’와 같은 피상적인 질문이 되기 쉽다. 그러나 한편으로 필자의 또 다른 경험을 떠올렸을 때, 공간통계를 전공하는 한 대학원 친구와 몇 시간 동안 지도학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게 토론했던 기억도 있다. 물론 그가 쓰는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만큼은 잘 느껴졌다. 그러므로 황진태 발표자의 제안처럼 융복합 연구가 '놀이'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려면, 먼저 연구실과 연구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을 허무는 일부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세 번째 메모에서 발표자는 한국 정치생태 현장 연구의 성실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연구자 스스로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성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필자는 연구자 본인을 지리학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을 신성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현장에 대한 강박은 오히려 현장을 단순히 '신성한' 이론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끌어다가 쓸 자원이 넘쳐나는 곳으로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 필자 또한 석사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논문 작성을 위해 대상화하곤 했던 것은 아닌지, 역지로 이론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등의 반성을 하게 된다.

비인간 예외주의를 슬슬 경계하자는 다섯 번째 메모의 제안 역시 한국 정치생태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검토에 대한 성실함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황진태 발표자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구 이론의 무비판적인 수용 경향을 우려하면서, 그것의 한국적 적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매번 '열공'하자는 식상한 결론으로 끝나고 마는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에 흥미를 잃기 쉬운 것처럼, 선행연구들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와 기계적인 적용은 다양하고 풍부한 한국의 사례를 자칫 뻘한 결론으로 계속해서 이끌면서 학문적 관심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맥락을 살리는 이론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황진태 발표자가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메모에서 각각 제안한 현장 연구의 충실성 촉구, 이론의 엄밀한 검토와 적절한 적용 요구 모두 연구자 개인의 '덕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연구자 개인의 자질 부족만으로 문제 원인을 환원하기에는 너무 선부른 결론이 아닐까? 따라서 필자는 황진태 발표자의 메모 요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연구자 개인의 '성실함' 부족으로만 표상되는 듯한 분석 외에, 구조적인 원인 또한 나름

대로 탐색해 보려 한다. 그리고 필자의 이러한 시도는 발표자가 첫 번째 메모에서 언급한 ‘여전히 어려운 후학 양성’, 두 번째 메모에서 지적한 ‘이론적 혁신성의 부재’라는 평가를 함께 고려하면서 전개한다.

한국 지리학에서 ‘신진’ 정치생태 연구자가 잘 보이지 않고 그들의 이론적 혁신성이 부족하며, 현장의 충실성, 이론 검토의 성실함 등이 부족한 것은 오로지 연구자 개인만의 문제도 학계 구조만의 문제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황진태 발표자가 상대적으로 덜 언급하고 있는 구조의 문제를 특히 ‘신진’ 연구자의 처지에서 좀 더 살펴보고 싶다.

필자는 솔직히 말하자면, 석사를 졸업한 후에야 ‘정치생태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그저 개인의 공부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필자의 정치생태학적 관심을 미리부터 알아봐 주고 ‘정치생태학이라는 게 있더라’ 하고 넌지시 알려줄 수 있었던 동료와 선배들이 부족했던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관심을 공유하는 또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니, 황진태 발표자가 통렬히 비판했던 정치생태학 내에서의 이론적 혁신 또한 당연히 쉽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황진태 발표자가 높게 평가하는 선배 세대의 역량, 특히 그들이 이루어 왔던 이론적 혁신과 분석의 예리함이 왜 아래 세대로 흐르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구조적으로 꽉 막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론적 혁신과 학계의 변영, 그리고 후학의 부재 문제는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고, 단일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게, 이제 막 정치생태학 무리에 참여하게 된 필자의 인상비평을 세대별로 조악하게 남겨보고자 한다.

먼저, 윗 세대가 학문적 경력을 위한 이론적 정교화 과정에서 후학 양성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론적 정교화와 혁신은 결국 학자 본인이 읽은 텍스트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며 큰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학문적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후학 양성에 상대적으로 관

십이 덜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선배 세대들이 처해 있던 한국의 역사-지리적 조건들을 참작할 필요도 있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진보적인 학술 활동을 해온 윗 세대가 처해 있었던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후학 양성에만 전력을 쏟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에는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일이 많았고, 또 그것이 지식인의 의무로 여겨진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황진태 발표자가 지적해 주었던 이론적 혁신 부재 문제는 단순히 신진 연구자들의 성실함 부족만으로 환원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선배 세대의 학문적 역량을 아래 세대로 적극적으로 전수하는 지속적인 교류 과정을 통해 이론적인 ‘돌파’에 걸리는 시간을 온 세대가 함께 협력하여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대학원 연구실 안에서 비슷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윗 세대와 아래 세대를 연결해 줄 수 있었던 중간자들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가 그랬듯, 과거에 학문적 문제의식은 정치생태학적이었으나 그것을 정치생태학이라 부르는 줄 몰라서 그 언저리를 스쳐나간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종종 나타날 이런 대학원생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스스로를 정치생태학자로 부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필자는 황진태 발표자를 포함해 자신을 처음으로 ‘정치생태학자’로서 규정하기 시작한 중간 세대의 역할이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간 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처해 있었던 열악한 물적-사회적 조건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간 세대는 윗 세대보다도 경제적 조건 등에서 훨씬 더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연구 성과 및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몇몇 반짝반짝한 ‘소장학자’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필자는 또 한편으로 반짝이는 별들만 바라보다 보니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스러져 간 이름 없는 수많은 학자들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여기에서 진보적인 학문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진보적 학문 실천은 위와 같은 여러 조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몇몇 훌륭한 학자의 능력들이 개인화되고 특권화되는 것을 끊임 없이 경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몇 뛰어난 능력으로 만들어 낸 성과를 적극적으로 사회화하고, 다른 연구자들로 그들의 문제의식과 경험이 공유되고 확산할 계기들을 지속해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정치생태 연구의 최전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황진태 발표자와 최후방에서 이제 막 대열에 참여한 필자가 발표자와 토론자로 만난 것은, 그 자체로 한국 정치생태 연구의 현 단계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황진태 발표자가 지닌 능력의 적극적 사회 환원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원고접수일: 2024.02.25.

최종원고접수일: 2024.02.25.

## 참고문헌

- 김준수. 2018.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 관계의 재조정: 감응의 통치를 통해 바라본 도시 비둘기」. 《공간과 사회》, 제28권 1호, 55~100쪽.
- 김준수·이강원·최명애·박지훈·황진태. 2022. 「인간 너머의 국가론에 대한 다학제적 논평」.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1호, 109~116쪽.
- 김지영. 2021. 「일본제국의 '국가풍경'으로서의 금강산 생산: 금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33권 1호, 106~133쪽.
- 김지혜·김우창. 2022. 「실천 지향 연구에서 실천을 내재한 연구로: 에스노그래피 방법론을 통한 환경사회학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6권 1호, 223~263쪽.
- 박진영. 2023. 『재난에 맞서는 과학』. 민음사.
- 최병두. 2020a. 「인류세를 위한 녹색전환」. 《공간과 사회》, 제30권 1호, 10~47쪽.
- \_\_\_\_\_. 2020b. 「코로나 19 위기와 방역국가: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30권 4호, 7~50쪽.
- \_\_\_\_\_. 2022. 「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 생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균열」. 《공간과 사회》, 제79호, 115~165쪽.
- 황진태. 2018.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선 융복합 연구를 위한 시론(I)」.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3호, 283~303쪽.
- \_\_\_\_\_. 2019. 「박정희 정권기 국립영상에 재현된 '국가-자연': 소양강댐을 사례로」. 《지역사회학》, 제20권 1호, 91~118쪽.
- 황진태·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3호, 348~365쪽.
- Hwang, J. T. 2015. "A study of state-nature relations in a developmental state: the water resource policy of the Park Jung-Hee regime, 1961-79."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47, No.9, pp. 1926~1943.
- \_\_\_\_\_. 2021. "Theorizing the more-than-human stat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73, No.4, pp. 641~649.
- Whitehead, M., Jones, R., Jones, M. 2007. *The Nature of the State: Excavating the Political Ecologies of the Modern State*. Oxford University.